



# 주간 통일정세

2011-4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 "무적군대도 붕괴"...리비아사태 간접거론(10/3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1일 "김일성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새 세대들에게 달렸다. 새 세대들의 건전한 성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사상무장을 독려
  - 이 신문은 이날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이다'라는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은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삶의 요람"이라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역사에는 위인을 만나 세계에서 존엄을 떨치던 민족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퇴·몰락하고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당도, 무적을 자랑하던 군대도 붕괴된 사실이 적지 않게 기록돼 있다"며 "우리 인민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이 영광을 대대손손 높이 떨칠 것"이라고 전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존엄을 떨치던 민족'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당' '무적을 자랑하던 군대'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리비아사태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부자, 인민군 제789부대 시찰(10/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비서, 김경옥·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하는 군대에게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지시
  
- **김정일·정은, 류홍차이 중국대사 접견(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류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방북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인사를 전하며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인 올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이 촉진됐다고 강조
  - 그는 또 올해 리위안차오(李源朝)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등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양국이 실속있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 자리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 당비서 등이 배석
- **김정일 부자, 공군 연합부대 훈련 참관(11/2,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연합부대의 훈련을 지도(참관)했다고 2일 조선중앙TV가 보도
  - 부대 조종사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 비행을 했으며 중앙TV는 "훈련이 시작되자 조종간을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우리의 비행사들은 평시의 훈련을 통해 다져온 자기들은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소개
  - 훈련 참관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김경옥·김명국·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10.31 駐北 중국 대사 '류홍차이'(劉洪才) 접견·만찬(11/1, 중통·중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 시찰(10/31, 중·평방·중통)
- 김정일, 공군 연합부대 훈련 지도(11/2, 중통·중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2군부대 시찰 및 태성기계공장 현지지도(11/3, 중·평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우리(北)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김일성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함으로써 이 영광을 대대손손 높이 떨칠 것"이라며 "金父子의 사회주의건설 찬양과 청년들의 사회주의 수호투쟁" 선전(10/31, 중통·노동신문)
- 김영일(黨비서), 11.1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 대표단과 담화(11/1, 중방)
-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10.29/강계뜨락또르공장, 희천연하기계 종합공장 등 5곳)는 "지식경제형 경제강국 건설과 선군조선의 창조와 비약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 강조 및 "자강도에서 이룩된 최첨단 돌파전(생산공정의 CNC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등)의 모범을 따라배워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자"고 독려(11/2, 중통·노동신문)
- 한대성 駐이탈리아 北 대사, 10.28 駐在國 공산주의자당 총비서 면담(11/3, 중방·중통)
- 김영남, 11.3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 대표단과 담화(11/3, 중통·중방)
- 김영일(黨비서), 11.3 駐北 나이지리아 新任 대사와 담화(11/3, 중통)
-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대 조선의 역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여 온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라고 持續 '사회주의 찬양 및 진리와 불패성' 주장(11/4, 중통)
- 자강도 노력혁신자들 등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11.4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1/4, 중통·중방)
  - 김영남, 최영림, 김영춘, 등과 관계부문 일꾼들,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참가
  - 문경덕(평양시黨 비서/사회), 김기남(黨 비서)·양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연설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駐적도기니 北 대사로 '곽지환' 임명" 보도(11/5, 중통)

나. 경제

● 태국 대홍수 여파로 北식량난 가중 예상(11/1, 자유아시아방송(RFA); 블룸버그통신)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세계 식량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도 타격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세계 식량전문가들은 태국에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전 세계적으로 쌀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9일 대홍수 여파로 태국산 B등급 쌀이 34% 오른 t당 85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추정



- 곡물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중국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는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방송은 전망
  - 북중 국경지역에 나와 있는 한 북한 무역상은 RFA 측에 "혜산과 신의주 지방에서 현재 햅쌀 1kg은 3천원을 넘었다. 중국산 수입쌀도 2천800원 한다"며 "지금이 가을철인데도 쌀값이 7월보다 500원이나 더 비싸다"고 전함.
- **北中교역 사상 첫 40억 달러 돌파(11/1, 미국의소리(VOA))**
    - 북한과 중국 사이의 올해 1~9월 교역액이 4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양국 간 교역액은 41억9천4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남.
    - 방송은 연말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지난 9월 말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33% 늘어난 18억2천만 달러, 수입은 50% 증가한 23억7천만 달러였으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철광석, 비합금선철, 아연 순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20t 이상 화물차, 석유제품, 직물류, 질소비료 순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강성대국 원년엔 식량배급 정상화" 선전몰두(11/1, 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식량난에 따른 일반주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연합뉴스가 전함.
    - 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주로 주민교양시간 등을 통해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는 예전부터 강성대국이 되는 해에 정상적인 식량배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함.
    -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식량배급'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식량난으로 점점 고조되는 주민 불만을 일시적으로나마 무마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이라며 북한의 내년 완전 배급제 주장이 사실상 내부 선전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뉴스는 전함.
  - **유니세프 "北 어린이·임신부 식량지원 시급"(11/2, 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있으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 비자야 라즈반다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 어린이 등을 위한 식량 지원 활동에 2천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460만 달러만 접수됐다"며 "기금 지원이 없으면 영양실조



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함.

- 라즈반다리 대표는 영양 공급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북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북한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도 비슷한 기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함.

● **"北 황금평에 사무국 개설...개성모델 도입 예상"(11/2, 연합뉴스)**

- 착공식 이후 5개월 가까이 허허벌판 상태로 있던 북한-중국 간 자유무역지대인 황금평에 북한이 사무국 형태의 실무기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뉴스에 의하면, 대북소식통은 2일 "북한이 황금평에 10명 안팎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개설했다"며 "개설 시점은 대략 8~9월 정도"라고 말함.
- 특히 사무국에는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국 부총국장을 지낸 최현구라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황금평을 개성공단 형태로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합영투자위는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 및 나선특구 합작개발에 합의한 기관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리철 전 주체내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소식통은 "투자위에는 김일영, 정진성 부위원장이 있는데 김철진 평건 투자개발그룹 회장 등이 추가로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며 "김 회장은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을 총괄한 북한의 경제통"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황금평 사무국 개설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중공동관리위원회 밑에 어떤 형태로든 실무기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함.
- 북한이 황금평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투자유치를 서두르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황금평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선지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中방문 北주민 절반은 근로목적...작년比 42%↑(11/2, 미국의소리(VOA))**

- 올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 2명 중 1명은 방문목적으로 '근로'를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정부의 국가여유국 자료를 인용해 2일 전함.
- 국가여유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3분기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1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만3천700명보다 31% 늘어났으며, 이 중 근로 목적으로 중국을 찾은 북한주민은 전체 방문자의 절반 수준인 5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8천700명에 비해 42% 증가함.



● WFP 北사무소장 "곡물수확량 작년보다 늘어날 듯"(11/3, 연합뉴스)

- 클라우디아 본 로엘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사무소장은 3일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으로 식량위기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로엘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올해 북한이 수확한 곡물 가운데 쌀과 옥수수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만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 영양실조가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 "WFP가 북한에서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WFP와 합의한 모니터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며 "WFP 관계자들은 청진과 함흥, 원산 사무실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며 일한다"고 소개
- 또 "청진 등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판매되는지 확인한다"며 "WFP 모니터링 요원들은 지난달 83개 군(郡)을 방문해 300명이 넘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힘.
- 그는 대북 지원식량의 군부 전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인지 명확해야 하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 조건도 없는 대북 식량지원 때문에 혼란과 오해가 발생한다"고 지적

● 북한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11/3, 연합뉴스)

- 기상악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힘.
- 한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GDP 증가율은 지난 2008년 3.1%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역전했지만, 2009년 마이너스(-0.9%)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농림어업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이 경공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고 설명
- 지난해 북한의 농림어업은 냉해, 태풍 등의 영향을 받아 농산물 등의 생산이 부진해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광업은 금속광물과 비금속 광물 생산이 늘었지만,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0.2% 떨어짐.
-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생산이 줄면서 전년보다 0.3%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부진이 완화되고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등이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0.2% 늘어남.
- 또한 지난해 중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 비중이 36.3%로 가장 컸고, 서비스업(31.0%), 농림어업(20.8%), 건설업(8.0%), 전기가스수도업(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뉴스는 전함.



-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상품기준)는 41억7천만 달러로 1년 전(34억1천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15억1천만 달러로 42.5%, 수입은 26억6천만 달러로 13.2% 증가했고, 남북교역 규모는 19억1천만 달러로 13.9% 늘어남.
  - 한편,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은 일반교역과 대북지원 품목은 감소했지만, 개성공단으로의 원부자재 반출이 늘어 16.6% 증가했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의 반입은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개성공단 생산품을 중심으로 11.7% 늘었다고 신문은 전함.
- "美, 북한내 유해 발굴에 570만 달러 지불"(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방부가 내년 봄 재개할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의 부대 비용으로 북한에 약 57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비용이 평안북도 운산군과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 베이스캠프 건설, 북한 측 인력의 임금, 차량 임대비, 헬기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
    - 파커 공보관은 "북한에 지불하는 부대비용은 미국이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미국이 특별히 북한에 더 많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함.
  - "北주민 식량배급 1달만에 증가...하루 355g"(11/4,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1인당 하루 355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4일 보도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배급량이 증가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한 주민의 하루 식량배급량은 지난 4월 400g에서 5월 190g, 6월 150g으로 줄었고 7~9월에는 200g 수준을 유지하다가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임.
    - 한편 북한 당국은 원칙적으로 주민 한 명에 하루 573g의 식량을 분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 北관광 중국인 13만명...36.4%↑(11/4, 미국의소리(VOA))
    -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2010년 중국 관광업 통계 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3만1천100명이라고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관광을 전면적으로 다시 허용하고 북한 당국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쓴 결과로 보임.



- **하반기 유엔 대북 긴급구호기금 지원액 '0'(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2년간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받아 온 지원금을 올 하반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CERF는 북한에 2009년 1천800만 달러, 2010년 1천3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상반기에도 긴급대응지원금 1천만 달러, 자원부족지원금 500만 달러 등 1천5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CERF가 최근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하반기 CERF의 긴급대응지원금과 자원부족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유엔기구들의 추천을 받아 CERF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자원부족지원금의 경우 이미 7월에 결정돼 올해 북한에 지원할 금액은 없다"며 "다만 긴급대응지원금의 경우 11월과 12월에 북한내 인도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함.
  
- **中, 북한광물 싹쓸이 수입...작년비 3.5배 급증(11/6,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등 광물자원 규모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3.5배 늘어난 8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량이 급증한 것은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최대한 달러를 확보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와 중국의 경쟁적인 자원확보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6일 연합뉴스가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중국당국이 집계한 '북중 광물자원 수출입 동향(2008~2011년)'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중국의 광물 총수입량은 842만3천(8억5천200만 달러)로 집계
  - 중국이 수입한 광물은 대부분 석탄(무연탄)으로 올해 1~9월 수입량은 819만t(8억3천500만 달러)으로 이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총수입량 290만t(2억3천900만 달러)에 비해 수량, 금액 모두 3배 안팎 급증한 것이어서 무연탄 수입 증가가 결국 전체 광물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
  - 북한이 이처럼 광물 수출량을 급격히 늘린 것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인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각종 행사에 쓸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광물자원은 2008년 85만3천t(5억4천100만 달러), 2009년 76만t(3억2천700만 달러), 2010년 92만1천t(4억7천800만 달러), 2011년(1~9월) 73만2천t(5억9천200만 달러) 등으로 그중 대부분이 원유임.



■ 기타 (대내 경제)

- 北 편직공업관리국 10월 계획수행률 104% 달성/식료일용공업성, 月계획 초과 수행/방직기계공업관리국, 前年 대비 생산 113% 성장 등 "경공업 여러단위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수행" 선전(11/2, 중통)

다. 군사

● "시리아, 북한 무기 조달 강화 지시"(11/6, 교도통신)

- 시리아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담당하는 자국 연구기관에 지난 4월 북한의 무기나 관련 물자 조달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중동 정세에 밝은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이 외교 관계자는 북한 측 창구인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가 지난 4월 시리아의 치안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측에 기술자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통고했지만, 시리아의 강한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고, 4월25일에는 스킨드 D(사거리 약 700km) 미사일 개발의 진전 상황을 검사하고 추가 교섭을 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또 시리아가 지난해부터 8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두 10기의 스킨드 D 미사일을 인접 레비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에 넘겼으며 "(시리아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북한의 협력이 불가결해졌다. 헤즈볼라에 대한 스킨드 미사일의 이전에도 북한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평양미술단, 中 서커스대회서 우승(10/31, 신화통신)

- 북한의 평양국가미술단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 서커스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
- 통신은 평양국가미술단이 지난 30일 열린 중국 우차오(吳橋)국제서커스대회에서 러시아 서커스단, 중국 허베이(河北)성 곡예단과 공동으로 대상인 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 개성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의 영통사 복원 6주년을 맞아 남북 불자들이 31일 영통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및 열반다례제 합동법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합동법회에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영통사 승려, 신도들이, 남측에서는 천태종 사회부장인 안산 스님 등 천태종 승려와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 **중지린성 김일성기념관 리모델링 재개관(11/1, 조선중앙통신)**
  - 중국 지린(吉林)성 푸쑹(撫松)현에 있는 김일성기념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재개관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전함.
  - 방송은 "항일혁명열사 장위이화(張蔚華)의 옛집에 개건 확장된 김일성 주석 기념관 개관 행사에는 열사의 아들인 장금천과 진조이 푸쑹현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연샤 현 인민대표대회 당서기, 선양(瀋陽)주재 북한영사관의 부총영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北 5세 미만 아동 43% 정상기에 미달"(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발육부진이며, 5명 중 1명은 체력저하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1 인간개발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UNDP가 지난 2일 발표한 '2011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9년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43.1%가 영양실조로 국제기준의 권장키보다 작은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또 키에 비해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체력저하 상태의 5세 미만 어린이도 전체의 20.6%로 집계
  -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08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50명이었고, 북한 인구 2천450만 명의 평균 나이는 2011년 현재 32.9살이었지만 전체인구 중 어린이와 노인 비율은 47.4%에 달함.
  - 노동 참여율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북한 남성 77.5%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성 참여율은 55.1%에 그쳤으며, 북한 의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도 15.6%에 불과했으며, 문맹률은 0%로 나타남.
  
- **국제적십자, 北서 홍수 견디는 주택 건축법 전파(11/4,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달 11~14일 황해도 청단군과 연안군에서 북한의 국가과학원과 함께 홍수에 잘 견디는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한 연수회를 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IFRC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수재민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썩은 나무, 흙벽돌 등 붕괴된 건물의 잔여물을 이용해 집을 짓고 있어 홍수가 다시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
  
-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1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무국적 탈북고아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림받거나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국적을 갖지 못한 아동 등을 가리킴.
  -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이들이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의 상당수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며 "탈북여성의 자녀는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北 '국가우표발행국', 「대동여지도」 발행 150돌 기념우표(개별우표 1종)와 우표들(개별우표 4종) 제작(10/31, 중통)
- 北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예술영화 '우리의 내일은 더 푸르다' 창작(11/5,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붕괴시 26만~40만 병력 필요"(11/2, 연합뉴스)

-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과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국경 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국방 · 안보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최근 계간지 '국제안보'에 공동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 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
- 이 논문은 북한 붕괴시 식량부족 사태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북한 내에서 치안력을 유지할 안정화 작전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난민 유입이 예상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국경 통제 ▲WMD 제거 및 안전한 확보 ▲재래식 무기 무장해제 ▲북한군 저항세력에 대한 억지 및 궤멸 작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특히 북한 붕괴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임무는 북한의 핵, 생 · 화학무기 등 WMD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 붕괴시 중국이 국경통제나 WMD 제거를 위해 북한 내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
- 이에 따라 중국군 투입으로 인한 한미 양국과의 갈등 고조를 막고 오해를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중국 측과 공식적인 차원에서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 협의에 미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필리핀, 자국 노동자 파견 금지국에 北 포함(11/3, 미국의소리(VOA))

- 필리핀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41개국에 자국 노동자 파견을 금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 해외고용국(POEA)은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에만 노동자를 파견한다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으며, 이 조항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만 자국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中상무부, 대북투자 위험성 '간접 경고'(11/3, 미국의소리(VOA))**

-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 투자합작 안내서'에서 자국 기업에 북한의 투자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북한과 하청계약을 할 때 대금지급, 외환환수 등에서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상무부는 또 안전사고와 관련해 북한 법률에 배상에 대한 책임규정이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으며, 대북투자 때 자본금과 임금 문제도 주의사항으로 꼽음.
- 건설사업의 경우 기계장비나 자재 준비 등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북한 내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이밖에도 북한의 외국인 노동시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내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가 입수됐을 때는 진위를 판단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

■ **기타 (대외 일반)**

- 咸北 청진시 - 러시아 하바롭스크市, 10.31 친선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 조인(11/4, 평방)

나. 6자회담(북핵)

● **신임 임성남 평화교섭본부장, 첫 방중(11/1, 연합뉴스)**

- 한국 측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임 본부장은 공항에서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관련해 남북, 북미 간 2차례 협의 있었고 한국 측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관련국들과 여러 차례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그런 협의를 기초로 6자 의장국인 중국 측과 현 상황을 평가, 공유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잇따



라 만날 예정

- "北, 美에 경수로 제공 최우선 요구"(11/2, NHK)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제네바 2차 북미대화에서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제공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고 NHK가 2일 익명의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김 부상은 지난달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 측 관계자에게 "(UEP는) 전기 생산을 위한 평화적 활동이다"라는 되풀이한 뒤 UEP를 중단하는 대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경수로형 원전을 제공하라고 최우선으로 요구함.
  - 이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함.

3. 대남정세

- 류우익, 취임 후 첫 방미..대북정책 조율(10/31,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1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31일 밝혔다
  -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류 장관은 빌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
  -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미가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류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정책 공조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장관 "이산상봉 확대·정례화 기대"(10/31, 연합뉴스)
  -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31일 "통일부와 한적(대한적십자사)이 서로 협력하고 북측에서도 호응하도록 해 이산가족상봉 숫자도 늘리고 가능하다면 정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유중근 신임 한적 총재와 면담을 한 류 장관은 "총재도 이산가족상봉이 금년에 안 이뤄진 것에 아주 섭섭해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노력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힘.
  - 유 총재는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낼 준비가 다 됐다. 문이 열려 북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가기를 바란다"며 대북



영유아 분유지원을 승인해줄 것도 요청, 류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류우익 "55조원 통일재원 방안 올해안 마련"(11/1, 블룸버그통신)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르면 올해 안에 55조원 규모의 통일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서울발로 보도
- 류 장관은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재원을 조성하는데 국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정부도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외국인들도 기부할 수 있으나 외국 정부에 기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류 장관은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그는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취임 이후 강조해온 '방법론적 유연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단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

● 류우익 "北 핵포기하고 변화하면 전폭 지원"(11/3,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3일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류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남북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조성된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햇볕정책과는 다르다. 저는 북한의 태도와 성과를 봐가면서 현안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

● 서해상 탈북자 21명, 인천 통해 입국(11/5, 연합뉴스)

- 북한 주민 2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상에서 남하 중 해군 함정에 발견돼 인천을 통해 입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은 지난 달 30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대청도 서쪽 41km 해역에서 5t급 목선



한 척을 발견했으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37.8km 떨어진 곳이었음.

- 해경은 이 목선에 접근해 북한 일가족 21명이 탄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배에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타고 있었고 남녀 비율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남)

- '10.26 서울시장 선거' 결과 관련 "시민후보의 승리는 변혁적 지향의 도수나 확산의 정도를 볼 때 '혁명'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며 "시민혁명이 민족번영과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는 일대변혁의 출발점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11/1, 조선신보)
- 南 국방부장관 등의 對北발언(도발시 군사분계선 넘어 전투기 출격)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호전적 폭언,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비난(11/2, 중통·노동신문)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委】 대변인 담화(11.3), 韓美의 "反北 군사적 결탁 강화와 전쟁책동(연례안보협의회·호국훈련 등)" 비난과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위협 및 反戰투쟁 선동(11/3, 중통·중·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당국자 "내달 중 북핵 한미일 3자 협의"(10/31)

-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북핵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중 한·미·일 3자 협의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등 한·미·일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미·일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3자 협의를 한 바 있음.
- 이 당국자는 "11월에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일 뿐 아니라 우리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는 만큼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중국과 협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3차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나 "그동안 남북·북미대화가 6자회담 재개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만큼 이러한 노력의 끝에는 6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화의 당사자 모두가 계속 협의해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화해야 할 문제의 초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3차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수순에 대해서는 "지난 2차례의 회담을 남북이 먼저 하면서 일종의 작은 패턴이 형성된 만큼 그 패턴을 굳이 깰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북미대화 전에 반드시 남북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3자 협의와 유사한 형태의 남·북·미 3자 협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이다이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 <남북 '외교전' 가열..긴박해지는 11월 한반도>(10/31)

- 11월에 접어들며 6자 외교전선에 긴박감이 감돌고 있음.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을 내린 북미 2차 대화 결과를 평가하는 연쇄적 '양자 접촉'과 세계 정상들이 대거 출동하는 '다자회의' 계기를 활용해 각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려는 외교전이 분주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가장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 위한 남북한의 경쟁임. 이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미대화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겹치기'식 외교적 동선(動線)에서 뚜렷이 드러남.
- 임 본부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김 제1부상은 27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렀음. 두 사람 모두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잇따라 만나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폈음.
  - 베이징 방문은 북측이 하루 앞섰음. 김 제1부상은 30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 출국하며, 임 본부장은 1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함. 양측 모두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남.
  - 남북한의 북핵협상 대표가 북미 2차대화가 끝나자마자 앞다퉀 중·러로 달려가는 것은 그만큼 현국면에서 중·러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됨. 우선 중국은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현시점에서는 비교적 '중립모드'를 유지하고 있음.
  -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하며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기본 입장이지만 한·미·일의 입장도 적절히 고려하는 스탠스임. 최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 같은 '균형외교' 기조임.
  - 그러나 중국의 중립적 태도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미 중심의 양자 협의 과정을 일단 '관망'해보려는 차원이며 일정시점에 가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러시아는 크게 볼 때 6자 내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음. 비핵화 사전조치를 주문하는 한·미·일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도 두둔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를 이유로 6자회담을 빨리 열어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듯 한 기류도 읽힘. 여기에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틀을 활용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런 상황에서 '3라운드' 후속대화를 모색 중인 남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세 확대 차원에서 중·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일단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기류임. 북미 2차대화에 대한 내부적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워싱턴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관련국 조율 행보는 다음 달 하순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통한 소식통들의 관측임. 미국 측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 내정자는 다음 달 중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마친 이후 북핵 업무에 공식 착수할 것으로 보임.
  - 11월은 다양한 형태의 정상급 다자외교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6자 관련국 간에 다양한 양자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그것임.

- 특히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 중인 한국은 중·러를 상대로 한 우군화 작업과 동시에 한·미·일 3자공조라는 '안전판'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AS를 무대로 한·미·일 3자 협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옴.
- 11월은 6자회담 재개의 최종담판 무대가 될 '3라운드' 후속대화를 앞두고 각국이 장외(場外) 협상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임성남-우다웨이 첫 회동(11/2)

- 6자회담 한국 측 신임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했음. 2009년부터 주중 공사로 근무한 임 본부장은 이미 우 특별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서로 익숙한 사이지만 같은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중국 외교부 청사 1층 회의실에서 만나 최근 열린 북미 2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절차를 논의했음. 우 특별대표는 회담 시작 전 임 본부장에게 6자회담에 활력을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건넸음.
- 임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는 등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임 본부장은 최근 열린 2차 북미 대화와 관련해 현재 대화 국면에 접어들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만큼 북한의 추후 태도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회담은 만찬까지 이어졌으며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적지 않은 중국 백주를 서로 나누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 한편 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우 특별대표를 만나기 전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도 만났음. 중국 방문을 끝으로 6자회담 관련 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개국 방문을 마친 임 본부장은 2일 귀국길에 오름.

### ● "北, 美에 경수로 제공 최우선 요구"(11/2)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제네바 2차 북미대화에서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제공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고 NHK가 2일 익명의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김 부상은 지난달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측 관계자에게 "(UEP는) 전기 생산을 위한 평화적 활동이다"라는 되풀이한 뒤 UEP를 중단하는 대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경수로형 원전을 제공하라고 최우선으로 요구했음. 이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 김 부상은 2차 북미대화 후인 지난달 27일 취재진에게 "우라늄 농축은 전기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 활동이며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그걸 그만두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외교 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경수로 제공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
-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21일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서도 북한이 흑연감속로와 관련 핵시설 건설을 동결하는 대신 관계국이 2003년까지 1천KWe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약속했음.
-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2000년 2월15일 북한에서 한국 표준형 가압경수로 건설 본공사에 착수했지만,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음.
-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와 기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관계국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6자회담 자체가 중단됐음. 북한은 지난해부터 자력으로 경수로형 원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음.

#### ● 류우의 "北 핵포기하고 변화하면 전폭 지원"(11/3)

- 미국을 방문 중인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3일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류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남북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조성된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햇볕정책과는 다르다. 저는 북한의 태도와 성과를 봐가면서 현안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은 현재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류 장관은 "저의 제1 카운터파트는 북한 당국"이라고 말했다. 또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저의 카운터파트"라고 덧붙였다.



- 류 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지금 역대 최상"이라면서 "잘 작동하는 한미동맹에 새로 더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미관계의 본질적 격상을 가져올 것이며,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한미관계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열쇠"라면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때 북한 문제는 한걸음 진전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북한 문제는 두세 걸음 후퇴했다"고 지적했음.
- 그는 "젊은 시절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 통일과 서독·미국 관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 통일부장관의 방미는 그 자체로서 북한과 인접국들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음.
- 류 장관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 역시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량을 믿고, 앞으로도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스콧 스나이더 CFR 연구원,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원(KEI) 소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음.

#### 나. 미·북 관계

##### ● "美, 북한내 유해 발굴에 570만 달러 지불"(11/3)

- 미국 국방부가 내년 봄 재개할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의 부대 비용으로 북한에 약 57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음.
-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비용이 평안북도 운산군과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 베이스캠프 건설, 북한 측 인력의 임금, 차량 임대비, 헬기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파커 공보관은 "북한에 지불하는 부대비용은 미국이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미국이 특별히 북한에 더 많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음.
- 앞서 파커 공보관은 지난달 말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해발굴의 현금보상 여부에 대해 "북측이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신변안전, 설비, 노동 등 부대비용은 부담한다"며 "하지만 미군 유해를 현금과 맞교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미 국방부는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북한에서 6·25전쟁 중 실종되거나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4차례 실시할 방침임.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33차례 작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유해 220여구를 발굴했지만 2005년 발굴인력의 안전보장 이유를 들어 작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달 태국에서 북한과 회담을 통해 유해발굴 사업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 美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법안 처리(11/3)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확인됐음. 이날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위원장 일리애나 로스-레티넨)는 지난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개정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이 법안은 이들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주내용임.
- 아울러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음. 개정안은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도록 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토록 했음.
- 또 이들 해당국 뿐 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이 추가돼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음. 다만 입항 규제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 등을 감안해 대상 선박을 '최근 6개월 입항 선박'에서 '최근 2년 입항 선박'으로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란식 제재' 방식이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한편 외교위는 이란의 에너지 업계와 거래하는 개인에 대한 비자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란제재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음.

### ● 美하원 '납북자·포로 결의안' 셋째 주 상정(11/4)

- 미국 하원에서 '6·25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달 셋째 주에 외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음.
- 미 하원 관계자는 3일 이 방송에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결의안 상정의 최소 요건인 외교위 소속 의원 10명이 포함된 25명의 공동 발의자 확보가 다음 주까지 충족될 것으로 본다"고 방송에 밝혔음.
- 또 결의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일 미국을 방문한 류우의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결의안 처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미 하원의원은 지난 7월 말 북한에 억류된 전쟁 포로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관련국이 노력해야 하고,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음.



## 다. 중·북 관계

### ● 김정일·정은, 류홍차이 중국대사 접견(11/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음.
- 류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방북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인사를 전하며 북중우호 조약 체결 50주년인 올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이 촉진됐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올해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 멩젠주(孟建柱) 국무원원 겸 공안부장 등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양국이 실속있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음.
- 이 자리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 당비서 등이 배석했음.

### ● 北中교역 사상 첫 40억 달러 돌파(11/1)

- 북한과 중국 사이의 올해 1~9월 교역액이 4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음.
-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양국 간 교역액은 41억9천4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났음. 방송은 연말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음. 지난 9월 말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33% 늘어난 18억2천만 달러, 수입은 50% 증가한 23억7천만 달러였음.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철광석, 비합금선철, 아연 순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20t 이상 화물차, 석유제품, 직물류, 질소비료 순이었음.

### ● "北 황금평에 사무국 개설...개성모델 도입 예상"(11/2)

- 착공식 이후 5개월 가까이 허허벌판 상태로 있던 북한-중국 간 자유무역지대인 황금평에 북한이 사무국 형태의 실무기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합영투자위원회 조직규모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북중 경협에 박차를 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대북소식통은 2일 "북한이 황금평에 10명 안팎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개설했다"며 "개설 시점은 대략 8~9월 정도"라고 말했음. 특히 사무국에는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국 부총국장을 지낸 최현구라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황금평을 개성공단 형태로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와 함께 작년 7월 발족한 뒤 대외 투자 유치를 지도·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급부상한 합영투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



- 원한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합영투자위는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 및 나선특구 협력개발에 합의한 기관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리철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투자위에는 김일영, 정진성 부위원장이 있는데 김철진 평건 투자개발그룹 회장 등이 추가로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며 "김 회장은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을 총괄한 북한의 경제통"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당국자는 황금평 사무국 개설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중공동관리위원회 밑에 어떤 형태로든 실무기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합영투자위 확대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다이위린 단동시 당서기는 지난달 28일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북 공동관리위가 이미 설립됐다"며 "시정부는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무국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북한이 황금평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투자유치를 서두르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황금평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선지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 中상무부, 대북투자 위험성 '간접 경고'(11/3)

- 착공식 이후 5개월 가까이 허허벌판 상태로 있던 북한-중국 간 자유무역지대인 황금평에 북한이 사무국 형태의 실무기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합영투자위원회 조직규모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북중 경협에 박차를 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대북소식통은 2일 "북한이 황금평에 10명 안팎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개설했다"며 "개설 시점은 대략 8~9월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사무국에는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국 부총국장을 지낸 최현구라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황금평을 개성공단 형태로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와 함께 작년 7월 발족한 뒤 대외 투자 유치를 지도·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급부상한 합영투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합영투자위는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 및 나선특구 협력개발에 합의한 기관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리철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투자위에는 김일영, 정진성 부위원장이 있는데 김철진 평건



투자개발그룹 회장 등이 추가로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며 "김 회장은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을 총괄한 북한의 경제통"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당국자는 황금평 사무국 개설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중공동관리위원회 밑에 어떤 형태로든 실무기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합영투자위 확대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다이워린 단독시 당서기는 지난달 28일 차이나데일리과 인터뷰에서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북 공동관리위가 이미 설립됐다"며 "시정부는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무국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북한이 황금평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투자유치를 서두르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황금평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선지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 작년 北관광 중국인 13만 명…36.4%↑(11/4)

-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2010년 중국 관광업 통계 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3만1천100명이라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이 수치는 2009년 9만6천100명보다 36.4%나 증가한 것임.
-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관광을 전면적으로 다시 허용하고 북한 당국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쓴 결과로 보임. 특히 북한은 지난해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에 중국과 우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칠보산 등 중국 접경지역의 관광지를 적극 개발했음.

#### ● 中, 코스 다변화 이후 北관광 활기(11/4)

- 관광 코스 다변화 이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음. 4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을 거쳐 금강산을 다녀오는 북한 관광이 개통 2개월 만에 4차례 이뤄져 400여 명이 다녀왔음.
- 연변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4번째 금강산 관광이 시행돼 130여 명이 다녀왔다"며 "관광객은 대부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탁을 받은 연변의 관광업체가 8월말 이 코스의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행한 뒤 지금까지 3차례 더 관광단을 꾸렸다고 전했다.
- 연길(延吉)에서 차량으로 훈춘을 거쳐 라진항에 도착,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다녀오는 이 관광의 경비는 3천300-3천800 위안(58만~66만원)으로, 중국 내 관광 비용보다 비싸지만 참가자가 많아 매년 모집 정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 훈춘에서 출발, 북한 라선과 러시아 하산 등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도 인기임. 지난 4월 개통한 이래 북한과 러시아를 함께 관광할 수



-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음. 이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훈춘 삼강국제여행사는 "6개월 만에 27개 관광단, 460여 명이 다녀왔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개통한 북한 칠보산 관광은 한 달여 만에 500여 명이 참가했음.
- 도문(圖門)에서 도보로 두만강 다리를 건너 북한 남양에 도착한 뒤 열차로 칠보산과 경성 온천, 청진 해변 등을 둘러보는 3박4일 일정의 이 관광코스는 북·중의 첫 정기 열차관광임.
  - 리중원(李忠文) 도문시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103명의 관광단이 개통식에 참가하고 다녀온 뒤 중국 기업체 등의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과 중국은 이들 코스 이외에도 올해 들어 창춘(長春)-훈춘-라선 자동차 관광을 신설하고 훈춘-온성 1일 관광을 20년 만에 재개했으며 종전의 화룡(和龍)-북한 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경지역 관광 코스를 대폭 확대했음.

#### ● 對中 북한석탄 수출 벌써 작년의 2배(11/5)

-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이 지난해 수출액의 배, 재작년의 4배를 넘어섰음. 5일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8억3천만 달러로 작년의 석탄 수출액인 3억9천만 달러의 2배를 넘어섰고, 2009년 수출액 2억 달러의 4배를 돌파했음.
- 같은 기간 양국간 교역액은 작년 동기간보다 77% 늘어난 약 42억 달러에 달했음.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3억7천만 달러, 수출액은 18억2천만 달러였으며, 수출액 가운데 석탄이 45.6%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음.
- 이 때문에 북한 내 에너지난이 심화되자 북한 당국은 지난달 말 자국 무역상들에게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北광물 쓸어담는 中...양국의 '이상이몽'>(11/6)

-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결국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외화를 확보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원무기화 흐름이 가속화되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중국의 무절제한 자원확보 정책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옴.
- 6일 연합뉴스가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중국당국이 집계한 '북중 광물자원 수출입 동향(2008~2011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중국 광물수출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
- 2008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48만t(1억9천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9년 373만3천t(2억6천100만 달러), 2010년 479만9천t(4억300만 달러)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월에만 842만t(약5천200



- 만)에 달했음.
- 이 같은 광물 교역에 힘입어 올해 1~9월 북중 전체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늘어난 41억9천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중 교역 의존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교역의 80%를 넘어섰음.
  - 북한의 대중 광물수출량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중국이 51%를 투자한 해산청년광산이 최근 준공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이 광물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함경남도 단천항 현대화 사업도 내년 4월 완료될 예정이란 점에서임.
  - 북한은 단천항사업이 완료되면 1만~3만급 선박 3척을 동시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 접안시설과 공장, 제련소를 잇는 컨베이어 등을 이용해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이 일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임. 특히 최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인 희토류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북소식통은 "일본이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철산광산에 관심을 두고 북한과 접촉하자 중국이 뒤늦게 철산광산에 대한 50년 독점개발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90%를 점유하는 중국이 북한 희토류에 관심을 두는 것은 결국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음.
  - 전 세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자원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잠비아, 앙골라 등에서는 "구리광산을 약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음.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광물 자원 수출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내놓고 있음.
  - 이들은 대중 광물 수출 증가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의 외화 확보 차원이라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전망함.
  - 조봉현 위원은 "북한은 광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로 배급제를 개선 하면서 후계자 김정은의 실적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정된 광물을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헐값에 넘기면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이 무너질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약 7천 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최근 연구자들은 남북통일로 발생할 비용과 편익(이익)을 분석하면서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통일편익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 "日 중의원 부의장 방북..국교 재개 타진"(11/3)

- 일본의 중의원 부의장이 북한을 방문해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북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70, 자민당) 중의원(하원) 부의장이 북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에토 부의장은 이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 월드컵 예선 일본-북한 전 관전차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며, 북한의 초청이 있을 경우 이달 8일 방문 길에 오를 예정임. 에토 부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키고 싶다"면서 "2원 외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이미 방북 계획을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있는지 주목됨. 교도통신에 의하면 에토 부의장 등 방북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북 의원단은 2008년 8월 이후 공식 접촉이 끊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타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 ● "日 의원단, 방북 연기..여론 비판 때문"(11/4)

-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북한에 가려던 일본 의원들이 남북 피해자 가족회 등의 비판을 받은 끝에 방북을 미루기로 했음.
-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중의원 부의장(자민당) 등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 의원연맹' 의원들은 9일부터 방북하려던 계획을 일단 미루기로 했음.
- 12월에 임시국회가 폐회한 뒤에 방북할 계획이지만 실현될지 불투명함. 이들은 9일부터 방북을 추진했음. 이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예선 북한과 일본의 경기 관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2008년 이후 중단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물꼬를 트려는 목적이었음.
- 그러나 남북 피해자 가족회 등이 지난 2일 "(의원들의 방북으로) 우리나라의 종래 입장이 바뀌기라도 한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방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자 여당인 민주당이 4일 자신들은 빠지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방북이 연기됐음.

## 마. 기 타

### ● 국제적십자사, 北서 홍수 견디는 주택 건축법 전파(11/4)

-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달 11~14일 황해도 청단군과 연안군에서 북한의 국가과학원과 함께 홍수에 잘 견디는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한 연수회를 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음.
- IFRC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수재민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썩은 나무,



- 흩벽돌 등 붕괴된 건물의 잔여물을 이용해 집을 짓고 있어 홍수가 다시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5일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수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6천480여 동의 주택이 파괴돼 1만5천800여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고, IFRC도 같은 날 황해도 연안군, 청단군 등지에서 2천 901채의 주택이 완파돼 약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 방송은 "IFRC는 8월부터 380여만 달러(약 43억 원) 규모의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말 2천300여개의 의약품 상자를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11월 말에는 수재민에 옥수수 288t을 제공하고 500여 채의 주택을 지어줄 계획"이라고 알렸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정부, 이달하순 SOFA 합동위..미군범죄 대응강화(11/2)

- 한·미 양국은 이달 하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해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임. 정부는 이 자리에서 SOFA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미군 범죄 대응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어서 양국의 협의 향배가 주목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일 "주한미군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예방·감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이달 하순 SOFA 합동위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SOFA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 병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1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역과 내·외국인 차별 없이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우리 사법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음.
- 그는 "주한미군 측도 이번 사건의 수사에서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속하고도 긴밀히 협력했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 ●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무산..대치 장기화(11/3)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첫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3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면서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됐음.
-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이에 대한 여야 합의로 회의 시작 10분 전에 본회의를 취소했음. 박 의장은 처리 안건이 많지 않은 데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긴장



- 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굳이 본회의를 무리하게 열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준안이 이날을 넘김에 따라 여야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박 의장이 이날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상임위 표결을 주문함에 따라 여야간 외통위 '대전'(大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외통위 회의실을 사흘째 접어둔 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여권에선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결국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음.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하면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10일 또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일각에선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여권이 성숙할 때까지 비준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는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여야는 이날도 ISD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립각을 높여갔다.
  - 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대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음.
  - 손학규 대표는 야5당·법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줄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 한미, '북핵 위기' 군사대응 절차 본격연습(11/4)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국방부는 8~9일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음.



- 이 연습에는 임관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를 포함한 양국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가함.
-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장인 홍재기 공군대령은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위기 상황에서의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과 한미 간의 협의,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참가자들은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를 토의하고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으로 2~3회 TTX를 실시한 다음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할 계획임. 북핵 위협에 대응한 운용수단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이 연습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임.
- 홍 대령은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정보공유 강화와 함께 실제 북한 핵위기 때 대응방안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한 데 대해 지난 3일 "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음.

#### ● 檢 '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연내 기소(11/4)

- 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2, 사건당시 18세)을 올해 안에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연내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공개수사 개시를 선언할 방침임.
-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며 "14년이나 된 사건이어서 범죄현장도 보존돼 있지 않아 기존 기록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검찰이 패터슨을 이처럼 조기에 기소기로 한 것은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됨. 검찰은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패터슨 측은 흥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살인사건 시효인 15년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내년 4



- 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검찰의 입장임.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내년 4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없애고자 기소하려는 것"이라며 "패터슨이 미국에 있더라도 기소 자체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앞서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이 끝나려면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검찰 관계자는 "패터슨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범죄인인도 재판이 끝나려면 3~4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도 패터슨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 사법당국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만 자국민을 외국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 과거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 검찰 관계자는 "일례로 패터슨이 흥기를 감춘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범행도구를 감추는 것은 당연히 범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는 패터슨 측의 재판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재판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주고받는 등 미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통일장관 이례적 訪美 '3마리 토끼사냥'에 방점>(11/4)

-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소 이례적임.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공식 카운터파트가 불명확하고, 2005년 12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방미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는 측면에서 그러함.
- 이 때문에 취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류 장관의 방미 배경과 의미가 더 주목받고 있음. 류 장관은 방미 기간 빌 번스 미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짐 웹(민주당)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났음.
- 류 장관의 이번 방미는 크게 3가지 의미를 띠고 있음. 우선 취임 이후 '유연성 확대'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공감을 이끌어냈음.
- 미 측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대 하겠다'는 류 장관의 대북정책 실체에 관심과 궁금증을 표시해왔고, 이 때문에 류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은 번스 부장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비정치 부문에서의 교류허용과 지원확대 등 유연성 확대 조치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미 측 관계자들은 "생각을 같이 한다" 등 대체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과 다르다"고 언급한 것도 남북관계의 지나친 보폭을 혹시 우려할지도



- 모를 미 측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통일외교' 확대임. 류 장관은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이 추진하는 것" 이라면서도 "이를 위한 주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4국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통일정책의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에서 넘어야 할 주변 4강의 역할을 강조한 것임. 통일의 걸림돌이 아닌 지지세력으로 이끌 필요성을 언급한 것임. 류 장관은 방미 이후 조만간 중국 방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르면 이달 말 방중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대북 메시지가 있음. 류 장관은 방미 기간 관련 언급을 통해 북한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음. "제1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당국이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이 그것임.
  - 유연성 확대 조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북측과 대화채널이 열리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 유도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포석임.
  - 또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남측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임.
  - 2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중인 류 장관은 4일 뉴욕으로 이동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마련하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설명회를 함. 5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7일 오전 귀국함.

## 나. 한·일 관계

### ● 日, 독도 관리사무소 건립 철회 요구(11/2)

- 일본 정부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립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음. 2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심의관은 이날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독도 현장관리사무소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지난달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방문객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독도에 접근하도록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480㎡, 3층 건물로 지어짐.



## 다. 한·러 관계

### ● <한-러 민관산학협의회 '한·러 대화' 개막>(11/1)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민관산학협의회 '한·러 대화(KRD)' 제2차 포럼이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했음.
- 2008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해 출범시킨 'KRD'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두 번째 포럼을 열었음. 행사 주관은 한국 측에서 고려대와 러시아 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가 각각 맡았음.
-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정치와 국제관계', '언론과 사회', '교육과 과학', '문화와 예술', '경제·비즈니스·환경·자원', '차세대' 등 6개 분과별로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임.
- '현대화와 혁신'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집권 기간 내내 강조해온 21세기 러시아 국가 발전 전략임. 'KRD' 양국 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화상회의를 통해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협력'을 KRD 제2차 포럼 주제로 결정했음.
-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랜드 호텔 유럽'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러시아 측에서 KRD 조정위원장인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과 한국 측에서 KRD 조정위원장인 김병철 고려대 총장, 이강국 한국 헌법재판소 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국 정치인, 법조계 및 학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음.
- 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러 양국 간에 설정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외교 관계 20주년이 되는 지난해 민간이 주도하여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러 대화가 출범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제2차 포럼에 참석한 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화하여 양국 간에 더욱 견고한 우호와 친선의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들이 도출되고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 크로파체프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러시아가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이며 조만간 이 협정이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들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한·러 대화 제2차 포럼의 결과가 이 같은 협력 프로그램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 한·러 정상 "北경유 가스관 긴밀협력"(11/2)

-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남·북·러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



- 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음.
-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랜드 유럽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데 공감했음.
  - 이 대통령은 "특히 가스관 사업은 경제성과 상업 조건이 전제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두 차례 도발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사이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음.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가스관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가스관 안전문제 등이) 해결된다는 조건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잉여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도 검토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전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2017년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두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조선·자동차·건설·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음.
  - 또 러시아 경제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음.
  - 이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블라디보스토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음.
  - 두 정상은 이밖에 양국 관계가 2008년 9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게, 역동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음.
  - 두 정상은 이어 정상회담에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 제2차 한·러 대화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한·러 국민 간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음.



-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후 러시아 방문이 세 번째인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모두 6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상간 연례 회동이 정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라. 미·러 관계

##### ● 러, "美 관타나모 수용소 관련자 입국 금지"(11/4)

- 러시아가 쿠바 내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미국인 11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9.11 테러 용의자 등이 수용돼 있으나 열악한 수감환경과 수감자들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비인도적 대우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 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만든 11명의 미국인 입국 금지자 명단에 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러시아는 미국이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관리들을 포함한 러시아인 입국 금지자 11명의 명단을 만들자 그 보복으로 미국인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했었음.
-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나 "러시아는 이 명단(미국인 입국금지자 명단)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블랙리스트)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우리는 (미국과의 긴장관계) 악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그 같은 악화의 징후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마그니츠키 리스트'로 촉발된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을 수습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이 마그니츠키 변호사 사망 사건에 연루된 관리들을 포함한 러시아인 입국 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도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미국인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공개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명단이 미국 명단보다 더 크다"고 밝혔었음. 러시아가 미국이 입국 금지한 자국인 수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입국 금지했다는 의미였음. 하지만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러시아가 미국과 같은 수의 입국 금지자 명단을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음.

#### 마. 미·일 관계

##### ● 日 TPP 참가, 美 정부·의회 사전협의 필요(11/3)

-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해도 실제 협상 참가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 3일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애초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동의에 9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으나 실제로는 의회가 동의 절차를 밟기 전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는 짧으면 1~2개월, 길면 3개월 정도가 걸림. 따라서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에만 5~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TPP 참여에 동의해도 내년 봄에 시작되는 TPP 제도 협상 과정에 일본이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TPP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의회가 반대할 경우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무산될 수도 있음.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가 TPP 협상 조기 참여의 이점만 홍보할 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달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민주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음.

## 바. 중·러 관계

### ● 원자바오, SCO 회담 참석차 러시아 방문(11/6)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회담 참석을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음. SCO 총리회담은 이번이 10번째로 현지시간으로 6~8일 개최된다고 통신이 전했다.
- 원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籠>) 외교부장,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등이 수행함.
- 청궈핑(程國平)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SCO의 지난 1년간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작금의 국제 및 지역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지난 2001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 출범한 SCO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함. SCO는 이미 중앙아시아 최대 역내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사. 일·러 관계

### ● 日, 러 여당 당대회에 전직 총리 특사 파견키로(11/6)



- 일본이 러시아 여당의 당대회에 전직 총리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일본 민주당은 이달 말에 열리는 러시아 통합러시아당의 당대회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낼 예정임.
-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달 14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면서 특사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임. 이달말 통합러시아당의 당대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푸틴의 출마가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 일본 측은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던 2001년 3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956년 소일공동선언은 평화조약 교섭의 출발점"이라며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을 중시하며 푸틴의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걸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